

2013년도 업무계획

# 2013년 국토교통부 국정과제 실천계획

2013. 4. 4

국 토 교 통 부

# ||| 목 차 |||

I. 국정과제 실천계획 ..... 1

II. 부처간 협업과제 ..... 33

III. 국정과제 추진실적 평가 및 환류계획 ... 34

## 국정과제 실천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국토 창조’**

- ☑ 지역균형발전과 환경과 조화되는 국토관리를 실천하겠습니다
- ☑ 좋은 일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 ☑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 출퇴근 교통난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 ☑ 건설물류산업의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 ☑ 보편적 주거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가. 국민 체감형 지역발전정책 추진

□ 주민 참여형 도시재생 추진

- 재건축·재개발 등 물리적 정비에서, 경제·사회·문화 등 종합적인 기능 회복을 위한 도시재생으로 도시정책의 방향을 전환
  - “지역 주도”, “정부 지원”의 원칙에 따라 추진
- 지자체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재생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는 지자체 및 주민의 역량강화, 기반시설 및 필요한 S/W사업 지원
  - \* 도시재생특별법을 제정('13.6)하고, '14년부터 본격 추진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특별위원회(총리실) 및 도시재생 재원 마련(기재부 등 협의)
-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원) '14~'18년간 선도지역 지원 로드맵 마련('13.6), 선도지역 지정('13.12) 후 계획수립비·기반시설설치비 등 지원

□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생활 인프라 확충

- 국가도시공원, 근린생활권내 생활공원, 공·폐가 및 유휴지를 활용한 쌈지공원 등 다양한 '동네 쉼터' 조성
  - \* 생활공원 정비 5개년 계획('14~'18) 수립 및 지원대상 선정('13.12)
- 공원, 녹지, 방범 등 생활인프라\*의 최저기준 및 평가지표를 마련하고,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생활수준 향상 및 격차 해소 유도
  - \* 생활인프라 대상범위 확정 및 지자체 평가 기준 마련을 위한 지자체 실태조사('13.4~9월)

□ 지방 중추도시권 육성을 통한 지역활력 회복 추진

- 도시 규모와 특성, 잠재력 등을 고려하여 지역성장을 견인·확산시킬 수 있는 도시권 육성 기본전략 및 추진방안 마련('13.12)

## 나. 지역 성장거점사업의 내실있는 추진

### □ 세종시, 혁신도시의 자족성 강화

#### ○ (세종시) 생활·문화 인프라 확충 및 지식산업센터 설립('16), 과학비즈니스벨트와의 연계발전 도모

\* 대학·병원·국제기구 등을 유치할 수 있도록 부지 매입비, 건축비 등에 대한 재정지원 추진('13.4, 행복도시법 국회제출)

#### ○ (혁신도시) 지역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창조경제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역별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13~'20)

\* 이전기관 연관산업 유치, 산학연유치지원센터 설치('13.9 혁신도시법시행령 개정)

### □ (새만금) 개발청을 설립('13년)하여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

\* 기본계획 수정하여 용도별 개발시기 조정 등 단계적 추진('13.9~)

### □ (제주국제도시) 첨단과학, 교육, 의료, 관광의 복합도시로 발전

\* 첨단과학기술단지, 영어교육도시, 헬스케어타운, 신화·역사 공원 등 활성화

### □ (낙후지역)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전략 수립

#### ○ 영호남이 인접한 섬진강변을 동서통합의 상징지대\*로 육성

\* 고흥 우주랜드 개발계획 수립 착수('13.3), 동서통합지대 조성 기본구상 수립('13.10)

#### ○ DMZ 일원에는 평화지대 프로젝트를 추진('13.4, 연구착수)하고 해안 및 내륙권에 휴양·관광벨트 조성을 위해 단계적으로 설계 착수('13.8)

\* (동해안권) 가족체험 중심 휴양·레포츠벨트, (서해안권) 생태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지구, (남해안권) 섬자원 특화, (백두대간권) 평창올림픽과 연계한 특성화지대

## 다. 환경과 조화된 국토관리체제로 전환

### □ 개발사업 프로세스 전환

#### ○ 개발사업시 先 지역합의 유도, 後 계획확정 방식으로 전환

- 환경문제 등에 대해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등의 합의를 적극 유도 (댐 건설사업 부터 절차 개선 추진)

- 국토·도시계획 수립시 시행하는 국토계획평가의 환경 관련 평가 항목을 확대하여 **환경계획과의 연계 강화**(‘13.12)

□ **과잉개발 예방**

- 개발사업의 실현가능성, 국토의 수용가능성, 지역 여건 등을 종합 평가하는 “**개발사업 평가 시스템**” 도입 검토
  - \* 경제성 이외에 지역특성을 감안할 수 있는 정교한 사업 편익분석 지표 개발
  - 일정규모 이상의 국가 또는 지역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평가
- 사업성격이 유사한 **국토부 소관 지역개발제도를 통·폐합**하여 유사·중복개발 방지(지역개발지원법 국회제출, ‘12.9)
- 개발사업 책임성 확보를 위해 **최고정책당국자 실명제 도입방안 마련**(‘13.12)
  - \* 적용대상 사업유형·규모, 대상자, 실패여부 판단, 실효성 확보 수단 등에 대한 논란이 있으므로 전문가·지자체·관계기관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적 방안 마련 계획

□ **난개발 방지**

- **비도시지역을 계획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해 성장관리방안\*** 도입(‘13.12)
  - \* 간이 지구단위계획 성격으로 기반시설계획, 건축물 용도 등 꼭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고, 개발행위시 동 방안에 맞는 경우에만 허용
- **용도지역별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차등화**하고, 기반시설 확보 기준, 환경·경관 기준 등을 구체화·합리화(‘13.12)

**라. 4대강살리기 사업 검증**

- (기본방향) 국민이 검증결과를 신뢰할 수 있도록 검증단 구성, 검증 절차 등을 민간이 주도적으로 추진
  - 검증은 보 안전성, 수질, 생태계 영향 등 사업 전반에 대해 시행
- (향후계획) 총리실에 검증 지원조직이 설치되는 대로 검증단 구성 원칙 등을 협의하고 검증 추진시 관련 자료 등을 차질없이 지원

가. 공간정보산업을 창조경제의 선도산업으로 육성

- ◇ IT·모바일 기술과 융합하는 공간정보 활용산업은 고부가가치와 청년일자리를 창출하는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급부상
  - \* 민간에서는 지적도·수치지도·항공사진·3D 영상 등의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내비게이션, 스크린 골프, 비즈니스 GIS 등 다양한 시장을 창출
- ◇ '12년 국내 공간정보 시장규모는 4.8조원 수준으로 공간정보산업의 고용유발효과는 타 산업 보다 높은 수준(12.4명/10억원, 전 산업평균 8.1)
  - \* '10년 세계 공간정보시장 규모는 89조원으로 연평균 11%씩 성장하여 '15년에는 150조원에 이를 전망('09, Daratech)

□ 오픈플랫폼 서비스의 고도화를 통한 신산업 창출 지원

- \* (오픈플랫폼) 고해상도 항공사진, 수치지형도 등을 바탕으로 정밀 3D, 지적도, 용도지역지구도 등 8종의 다양한 정보를 전 국민에게 제공중
- 부동산·교통 등 14개 국가공간정보를 추가 공개('13.5)하고, 웹기반으로 제공중인 오픈플랫폼의 서비스를 모바일 기반으로 확대('13.7)
- 창의적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쉽게 지도를 편집·가공할 수 있도록 Open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서비스를 강화('13.12)

□ 실내공간정보, 지적재조사사업('13~'30)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지하철·공항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간정보 맵을 구축하여 복지·안전 등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14~'17)
  - '시각장애인을 위한 실내경로 음성안내' 등 추진
- \* 실내위치정보 DB를 구축하는 방통위의 「LBS 플랫폼 개발사업」('12~'13)과 이통 3사의 「WiFi DB 구축사업」('13~'14)과 연계
-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지적불부합지 문제(전 토지의 14.8%)를 해소하고, 도로개설 및 지역개발사업 등과 연계하여 지방경제를 활성화

## □ 전문인력 양성과 공간정보 R&D 사업 추진

### ○ 기업체 실무연수 도입, 고용연계 아카데미 등 전문인력 양성

- \* 공간정보 인재양성 기본계획('14~'18)에 반영하여 '14년부터 본격 추진
- \* 창업 박람회·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13.11, 공간정보산업진흥원)

### ○ 생활밀착형 「국토정보 R&D 프로젝트」 추진('14~'20)

- \* '공간정보 전용위성 기술개발', '빅데이터 활용기술' 등 16개 과제 추진

## □ 공간정보의 융·복합을 통한 정부3.0 구현

### ○ 공간정보와 행정정보를 융합한 「공간 빅데이터」 구축('14~'17)

- 시범사업('13.4~'13.12), 추진계획 수립('13.4), 마스터플랜 수립('13.10)

- \* 집중호우시 침수예상지역, 교통상황정보, 대피소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부동산 임차시장 수요패턴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 등에도 활용 가능

### ○ (탈루세원 발굴지원)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임대소득 과소 신고자와 과세가 누락되고 있는 건축물을 쉽게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

- \* 국세청에서 추진중인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구축사업('12~'14) 지원

### ○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 도로·하천 등 국유지가 건축물에 무단 점유되고 있는 현황 정보를 제공하여 재정수입 확보 지원

- \* 국도편입 미불용지 해소, 국공유지에 대한 관리청 명칭변경·지목변경·토지 합병 등 지적공부 정비를 위한 세부방안 마련('13.4)

### ○ (해외교포 네트워크) 교포, 여행자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국내외 한민족의 인적·물적·비즈니스 정보를 위치기반의 플랫폼을 통해 제공

### ○ (소상공인 창업지원) 서민과 중소기업을 공간정보 기반으로 연결하는 플랫폼을 구축('13~'14)하여 소상공인의 성공창업을 지원

- 소상공인 지원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13.4), 실험시스템 구축('13.7)

## ▶ 최소 4.6만명의 일자리 창출

- \* 공간 빅데이터 체계 구축, R&D 및 지적재조사 등 5년간 1조원 투입계획

- 직접투자 효과 1.2만명, ITS 등 응용기술 서비스산업 발전효과 3.4만명



## 나. 건설·교통 기존 산업의 창조 산업화

### □ 교통 + IT ⇨ 첨단교통산업(ITS)

- \* 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전자, 정보, 통신, 제어 등의 기술을 교통 체계에 접목시킨 지능형 교통시스템
- \* 세계 ITS시장규모는 '11년 130억\$ → '15년 186억\$로 성장 전망('10, Global Industry Analysis)
- 벤처기업, 개인 등 영세사업자도 교통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하여 **新서비스 개발이 가능토록 교통정보 무상 제공**(법령 개정, 12월)
  - \* 교통정보를 활용한 스마트폰앱 개발 등이 가능토록 오픈플랫폼 서비스 확대('13.9)
- ITS 전문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국가별 시장분석을 통한 수출전략 수립 및 국제표준화 추진**
  - \* ITS도입 초기인 동남아, BRICs 국가 등 수출전략국 선정 → 수출지원단 파견('13.10)

### □ 도시 + IT ⇨ U-City 산업

- \* U-City : 첨단 IT 인프라와 유비쿼터스 정보서비스를 도시공간에 융합한 산업
- 민간업체의 U-서비스 정보유통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U-City R&D 연구 참여확대와 해외진출을 적극지원

### □ 산업단지 + IT + 문화 ⇨ 창조기업 인큐베이터

- 노후산단 재생과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첨단산업 유치
  - \* 노후산단 2차 사업지역 추가 지정(13.12)

### □ 항공 + 문화 ⇨ 항공레저업

- 항공레저 수요에 맞춰 항공레저업 신설(13.12)

### □ 자동차 정비 + 문화 ⇨ 자동차 튜닝업

- \* 국내 튜닝시장 규모 : 약 4조원
- 자동차 튜닝산업 발전 기반 마련을 위해 **튜닝 부품 인증절차 및 안전도 평가 기술 개발**

## 다. 해외건설 1천억불 시대 개막

### ◇ 해외건설을 성장동력으로 육성하여 우리경제의 활력 제고

\* 해외건설('12년 649억 \$) > 석유제품(562) > 반도체(504) > 자동차(472)

### ◇ 시장·공종 다변화, 고부가가치 산업화, 중소기업 진출 활성화 등을 통해 5년내 연 1천억불 수주, 5대강국 진입('11년 5.7% → '17년 9%)

\* '12년 수주현황(지역별) : 중동 57%, 아시아 30%, 중남미 10% 등  
(공종별) : 플랜트 61%, 건축 22%, 토목 13% 등  
(기타) : ENG 1.3%, 투자개발형 0.6%, 중소기업 5.2%

## □ 진출시장 및 공종다변화를 통한 안정적 수주기반 확보

### ○ 신시장 개척을 위한 현지교섭·발주처 초청 등 초기 진출 비용 지원을 확대하되,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점협력국 위주 지원

\* 지원대상 사업 선정('13.3)/ 건당 지원금액 확대(3천→5천만원 이상)

### ○ 개도국을 대상으로 주택·신도시·수자원 분야를 전략적으로 지원

- 정부 주도로 개발 마스터플랜 수립을 지원하고, 금융(EDCF, GIF) 제공과 연계하여 패키지형 인프라 수주 추진('13.4~)

\* 신도시·수자원 개발사업 등 분야의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대상국 선정(6월) → 대상국 협의 및 개발 MOU체결(9월) → 마스터플랜 수립 착수(11월)

- 우리의 개발·건설 관리 시스템을 전수하여 사업참여 기반 마련

- 제7차 세계물포럼('15 대구·경북)의 차질없는 준비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물시장 진출 기회 확대

\* 세계물포럼 조직위 구성('13.4), 제7차 세계물포럼 개시 행사 개최('13.5)

### ○ 대규모 핵심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타겟형 고위급 수주지원단 파견, 금융제공 방안 검토 등 범정부적 지원 집중

\* 주요 수주지원 계획 : 태국 물관리 사업(5월), 중동 플랜트/인프라 수주지원(7월), 알제리·모로코 인프라 개발(9월), 리비아 전후 복구사업(12월) 등

## □ 고부가가치 산업화 지원

- 투자개발형 사업진출 활성화를 위해 투자자금 확대
  - 해외개발사업 투자펀드 설립근거를 마련(해촉법 개정 발의, '13.5)하고, 수자원·공항 등 강점분야 투자용 펀드 조성 추진(Air펀드 등, '13.6)
  - 기 조성된 글로벌인프라펀드(4천억)는 중동국부펀드·다자개발은행과 공동투자 추진(국부펀드-GIF간 공동 투자사업 협의, '13.6)
- 투자개발형사업 발굴 확대를 위해 사업타당성조사 지원 강화('12 12억→'13 21억원)
- 해외건설시장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기술·수주 경쟁력 확보, 고부가가치 수주기반 마련을 위한 R&D 로드맵 수립('13.5)

## □ 중소기업 해외진출 활성화 지원

- 중소건설기업 진출 활성화를 위해 사업단계별로 맞춤형 수주정보 제공, 보증 등 금융지원 확대, 인력난 해소 등 전방위적 지원 강화
  - (입찰전)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의 수주 컨설팅을 강화(상담인력 39→50인, '13.5)하고, 공공기관·대기업과 동반진출 기회 제공
  - (입찰/공사) 건설공제조합 보증을 확대(1천억→2천억원)하고, 전문인력 양성(3천→3.5천명, '13.3~) 및 중소기업 OJT 규모 확대(200→400명, '13.4~)
- 중소기업에 해외기술코드, 구체적 진출사례 등 기술정보 제공('13.10), 초기자금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건설ENG의 해외진출 활성화 지원

▶ '13년, 700억불 이상 수주 전망(12년, 649억불)

\* 업체 입찰실적 및 계획 전수조사 결과(해건협)

## 라. 건설 엔지니어링산업의 경쟁력 강화

◇ 건설 ENG은 설계, 감리 등 업역간 칸막이와 인력 관리체계 미비로 업체들이 영세하고,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이 70~80% 수준

\* 2천여 건설ENG 업체 중 年 매출액 50억원 미만이 94% ('11년)

\*\* (美대비 기술수준) 원천기술 73%, 기본설계 73%, 상세설계 85%, 시공관리 83%

### □ 건설 ENG 역량강화를 위한 제도기반 구축

○ 건설 ENG 분야의 종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설계·감리·CM 등 칸막이로 분리된 건설 ENG 업역을 단일화(건기법 개정, '13.5)

\* 감리회사 427개 업체 중 319개(74%)가 설계·감리 겸업중('12.4. 기준)

- 업역별·발주청별 분리·관리 중인 업체 실적을 국가가 통합관리('13.6 시범운영)하여 해외 발주자가 요구하는 업체 실적자료 신뢰성 제고

○ 건설기술자·감리원·품질관리자 등 업역별로 구분된 관리체계를 단일화하고, 기술력을 객관적으로 반영하는 기술등급 체계로 개선

\* 개선방안 마련('13.4), 건기법 하위법령 개정('13.7. 입법예고)

### □ 건설 ENG 업계의 기술력 제고

○ 신기술 지정 활성화\*를 위해 “신기술컨설팅센터”를 운영('13.4)

\* 건설신기술 신청 건수는 연 50~80건으로 특허의 1/30 수준

- 설계시 수행하는 VE\*의 시공단계 적용 활성화 및 건설기술 R&D 지원('13년 364억) 등을 통해 민간의 기술개발 유도

\* (Value Engineering) 가치·기능향상을 위해 최신기술을 반영하여 설계를 재검토

○ 복잡·다양한 51종 설계·시공기준을 코드化\*('13.8)하고, 설계·시공시 민간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성능중심 기준으로 단계적 전환

\* (기준 코드화) 기준을 “공통기준”과 “시설별 기준”으로 구분하고, DB·포털로 통합관리

▶ 글로벌 건설 ENG 시장 점유율 : ('11년) 1.2% → ('16년) 5%

## 마. 산업단지를 창조기업의 인큐베이터로 조성

◇ 제조업 고용의 48%를 차지하는 일자리의 보고인 산업단지를 지역 창조기업의 성장 모태로 조성

\* 산단 제조업 고용 비중(%): (00) 29.2 → (04) 33.8 → (08) 42.8 → (09) 45.1 → (11) 47.8

### □ 미래 창조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산업 입지 중점 지원

\* 밀양(나노), 거제(해양플랜트), 사천(항공), 원주(의료) 등

○ 이를 위해, 입지수요 조사·분석('13.4~9), 지원대책 수립('13.10) 및 제도개선\* 추진(산입법 개정안 마련, '13.6)

\* 도시첨단산단을 미래·융복합 산업이 입지가 가능한 (가칭)미래창조산업단지로 개편

### □ 노후산단 재창조\*를 통해 기업 생산환경을 개선하고 첨단산업 유치

\* 노후 산업단지의 기반시설 개량·확충, 업종전환, 지원시설 확충 등

○ 대전, 대구, 전주, 부산사상 등 노후화가 심각한 산단에 대한 재생 계획을 우선 수립(3월, 43억)하고, 2차 사업지역 추가 선정(13.6~12)

- 대상지역 공모('13.6) → 평가위 실사 및 평가(7~10월) → 지역선정(12월)

\* 대전, 대구, 전주 산단 재생시, 총 매출액 10조원 증가(9.3 → 19.3조원), 일자리 2.6만명 창출(3.4만명 → 6만명) 전망

### □ 우수 인재를 산업단지로 유치하기 위해 산단의 정주환경 개선

○ 산단 주변에 주거(임대주택)·복지시설(유치원, 보육원)·문화·편의 시설 등을 입주시켜 미니복합타운으로 조성

- 충주·포천·완주·고령·함안 등 미니복합타운 사업지역에 대해 개발계획 수립 및 단지를 지정하고 단계적으로 개발 지원\*('13.6~)

\* 충주('13.6)·포천('13.8) 단지지정, 다른 지역은 시행자 선정·개발계획 수립중

## 바. 기업활동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 국민 눈높이에서 기업활동을 제약하고 국민 불편을 야기하는 모든 규제와 관행을 현장에서 국민의견을 수렴하여 조속 개선

\* 국토교통부 등록규제 1,157(정부전체 16.3%, '13.3월 기준)

○ 이를 위해 민관합동 규제개선 감시위원회 구성·운영

- 매월 발굴회의, 분기별 이행점검 및 우수 직원 포상

### □ 토지이용·건축 규제개선

○ 현행 국토계획법에 의한 국토이용체계에 대한 평가 및 개선 추진

\* 지자체·전문가 간담회('13.6), 제도개선 방안 마련('13.12)

○ 도시계획 및 토지이용에 있어 각종 인·허가절차 개선

- 복합민원 일괄협의회 확대 및 각종 평가·협의 통합(One-stop) 운영

○ 복잡다기한 용도지역·지구(318개)를 지속 점검, 통합·단순화

○ GB내 공장 증축시 승인절차 간소화(1~2년→6개월) 및 부담금 완화(50%)

○ 건축물에 적용되는 제반 법령을 하나로 모아서 국민에게 제공

\* 『한국 건축설계 규정(Korean Building Code)』 제정 추진

### □ 기업활동 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 관행적으로 첨부하게 했던 불필요한 행정자료 감축 추진

\* 부동산 공부 18종을 “부동산종합증명서” 1종으로 통합하여 발급비용 절감 등

○ 업종간 칸막이 제거

- 렌터카 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을 허용, 물류터미널에 제조 및 판매 시설의 입주를 허용

### 가. 교통사고의 획기적 감소

- ◇ 교통사고는 대부분 인적과실로 발생하며 도로 위험요소도 상존
- 인적과실은 기초적인 운전 습관 잘못으로 발생
  - \* 교통사고의 89%는 신호위반, 과속 등 기초 교통법질서 미준수로 발생
- 교통사고가 반복되거나 발생우려가 있는 위험도로가 560개소

#### □ 운전습관 개선

- (교육의 질적개선) 기존의 강의식 교육에서 빗길 운전, 안전띠 미착용, 급정거 등 체험형 교육으로 전환('13년 1.8만명, '17년까지 10만명)
  - \* 체험교육효과 : 교통사고 건수 50% 감소, 교통벌점 51% 감소

- 현재 1개소 운영(경상권)중인 **교통안전 체험센터**를 '20년까지 4개소로 확대('13년 수도권 센터(화성) 건립 추진)
- 경찰청, 지자체와 합동 TF를 구성하여 교육 콘텐츠 공유

#### ○ (캠페인 전개) 3대 운전악습\* 개선에 역량 집중

- (음주)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사고시 사망률 6배
- (DMB 및 휴대전화) 음주운전보다 더 위험(전방주시율이 더 떨어짐)
- (안전띠 미착용) 사망률 3.5배 \* (안전띠착용률) 앞자리 75%, 뒷자리 9%

- 교통안전 관련 부처(국토부, 경찰청 등),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 운영('13.5) 및 교통안전 시민패트rollers을 구성하여 국민동참 유도

- \* 우선, 지방국토청(5개)과 지방경찰청(16개) 간 기체결한 MOU('12년)에 따라 공동캠페인, 취약지점 합동점검 등을 실시하여 시너지 효과 창출

- 또한, 캠페인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 등 교통법규 개선을 위한 관계부처간 협력 강화

- \* 일본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0.03% 강화 후 음주운전 사고 78% 감소

- 교통안전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교통안전 시범도시' 지정 및 국비 지원(20억원)

## □ 위험도로 전면 개선

### ○ 위험도로 총 560곳을 '17년까지 100% 개선

\* '11년 93건 개선 결과 사고건수 47%(253→135건), 사망자 62%(13→5명) 감소

### ○ 고속도로·국도 휴게소간 거리가 먼 곳에 간이휴게소(졸음쉼터)를 '17년까지 220개소 설치(현재 112개 운영중, '13년 25개 설치)

\* 졸음쉼터 설치구간 사망자수 34% 감소(41명→27명)

### ○ 중장기적으로 교통사고, 결빙 등 도로상의 위험요소를 자동 감지하여 인근 차량에 전파하는 첨단 도로안전체계(C-ITS) 도입

\* C-ITS 서비스 표준안 마련(5월), 인프라 구축계획 수립(10월), 시범사업 추진('14)

## □ 자동차 안전성 강화

### ○ 사업용 차량에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장착 지원(220억원) 및 특별점검 실시

### ○ 자동차 정비 부품에 인증제도를 도입('13.2)하여 불량 부품 유통 예방

### ○ CNG 차량 내압용기 재검사 시설을 '14년까지 29개소 설치('13년 3개소)

### ○ 급발진 사고조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급발진 가능상황을 조성한 공개실험('13.6) 및 제3기관 검증('13.12) 등을 통해 의혹 해소

### ○ 첨단안전장치(차선이탈경고장치, 안전성제어장치) 장착지원 대상을 고속 및 전세버스에서 화물자동차까지 확대

## □ 항공·철도 안전

### ○ (항공) 운항집중시간대 밀착감독과 컨설팅방식의 감독으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종합상황통제센터 구축 등으로 선진형 사고예방체계 확립

### ○ (철도) 안전대책 추진체계를 보강하여 성과(고장, 사고 감소 등)를 조기 달성하고 안전인증체계 개편, 전문자격제도 확대('13. 12)로 안전관리 강화

### ○ 주요 교통정보 통신시설 사이버보안 강화('13.5)



## 나. 도시홍수 방지 기반 마련

### □ 도시침수 종합대책 추진

- 상습 도시침수지역에 대해 하수도-저류지-하천 등 도시 치수시설을 연계하는 유역종합 치수계획을 마련
  - 홍수 피해가 잦았던 계양천 유역 도시(인천·김포)에 대한 계획을 우선 수립('13.10)하고, '14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 집중호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역내 치수시설 간 연계관리, 도시 물순환 촉진 등 통합수량 관리체계 법제화(수자원관리법 제정안 마련, '13.6)
  - 유원지, 광장, 공공시설 등 주요 도시계획시설에 분산형 빗물관리 시스템\*을 적용하여 도시 저류능력 제고
    - \* 빗물을 유출하지 않고 침투 또는 저장할 수 있도록 빗물관리시설(도심형 인공 습지, 침투도랑, 빗물 저류조 등)을 설치
  - 빗물 저류기능을 갖춘 도시공원 조성을 위해 시범사업\* 후, 확대추진
    - \* '13년 서울 양재근린공원, 목포 이로공원 등 2개소
- 도시계획 수립시 재해취약성 분석과 재해취약지역 방재지구 지정 의무화(국토계획법 개정, '13.8)
  - \* 방재지구 지정 및 재해방지시설 설치시 건폐율, 용적률 등 인센티브 부여방안 마련

### □ 홍수 예·경보 시스템 강화를 통해 예방적 사전 대비 체제로 전환

- 강우레이더를 '16년까지 12기로 확충, 홍수 예·경보 정확도를 제고
  - \* 현재 3기 운영중, '13년 2기(화순, 금산) 설치
- 강우량별 침수예상도 등을 볼 수 있는 디지털 홍수위험지도를 '15년까지 전국 5대강 유역\*을 중심으로 제작(총연장 2,332km)
  - \* 한강·낙동강·영산강('12년 완료), 금강('13~'14), 섬진강('14~'15)

## □ 부처별로 추진하는 도시방재 시스템 연계 강화

- 부처별로 추진하고 있는 재해취약지역 DB를 연계하여 도시방재 통합허브를 구축(UPIS, '13.12)하고, 지자체와 공유
  - \* 산사태위험등급도(산림청), 자연재해지도(방재청), 홍수범람구역(국토부) 등
- CCTV 관제, 교통, 시설관리 등을 U-City 통합운영센터로 일원화
  - '14~'18년간 매년 5~10개 지자체의 재난관리시스템 통합 구축
    - \* 인천 청라지구, 세종시 등 통합플랫폼 시험결과 1개 지구당 10억원 비용절감 성과

## 다. 건설공사 및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 □ 건설공사 안전관리 강화

- 건설현장 추락사고 저감을 위해 가설물 구조에 대한 전문가의 검토를 의무화 (건기법 개정안 마련, '13.5)
  - \* 소규모 건설공사(20억원 이하) 재해 중 추락사고가 전체의 33% 수준('11년)
- 건설업체의 안전관리계획 심사를 전문기관에 전담시키고, 안전관리 계획 이행상황 점검 등 안전관리 내실화 추진 (건기법 개정안 마련, '13.5)
  - \* 현재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이 직접 심사하고 있어 전문성·객관성 결여
- 지자체의 건설공사 안전관리를 독려하기 위해 건설공사 안전관리 협의회(국토부, 고용부, 지자체 등)를 구성('13.4)하고 관리체계 마련('13.8)
  - 지자체 안전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지자체별 평가 및 인센티브 부여

### □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 대형 시설뿐만 아니라 주민생활과 밀접한 소형 교량, 공동구 등 소규모 생활시설도 안전점검 대상에 추가 (시특법 법제처 제출, '13.5)
  - \* 재래시장, 사회복지시설 등 소규모 취약시설물에 대한 무상 안전점검 시행
- 시설물 안전진단을 성실히 수행토록 안전진단 업체에 컨설팅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검증(평가규정 개정, '13.8)

## 라. 국민 일상생활 불편 개선

### □ 주거생활

- 층간소음 걱정 없는 아파트 공급을 위해 바닥구조 기준을 강화\*('13.5) 하고, 입주자의 생활습관도 개선(아파트 표준관리규약 개선, '13.12)
  - \* 두께 기준(210mm)과 충격성능 기준을 동시에 만족토록 개선(현재는 선택적으로 만족)
- 층간소음 분쟁을 입주자간 대면없이 중립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센터 설치(별도의 공익 재단법인 또는 기존의 아파트분쟁조정위원회 연계, '14)도 검토
- 아토피 제로 아파트를 위해 친환경자재 의무사용 대상을 확대(1,000 → 500세대 이상 단지, '13.5)하고, 환경오염물질 방출량 기준 강화(13.9)
  - 건축물에 대해 적정 환기횟수 기준도 마련(건축물 설비규칙 개정, '13.9)
- 주택성능실험센터를 구축('14~'17)하여 소음, 공기질 등 개선 연구
- 전기 제품처럼 건축물 거래시 에너지 성능 표기 제도 도입
- 노약자, 어린이 등의 안전을 위한 실내 설계 가이드라인 마련('13.12)

### □ 교통생활

- 자동차 실내 공기질 관리기준을 강화(포름알데히드, 에틸벤젠, 스티렌) 하고, 관리대상을 확대(승용 → 승용·승합·화물)하는 방안 검토
- 교통약자(전 국민의 24.5%)의 이동 편의를 위해 저상버스(900대) 및 장애인 콜택시(250대) 추가 보급('13년)
  - \* '16년 저상버스 도입률 41.5%, 장애인 콜택시 등 법정보급대수 100% 달성
- 교통약자에게 공항 간편 출입국 서비스(Fast Track) 제공('13.11)
- 전국 1,200여개 택시 콜번호를 단일번호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인터넷, 모바일을 통한 시외·고속버스 통합 발권시스템 구축('13~'14)

- 경제적·친환경 운전방식인 **에코드라이브** 확산을 위해 **체험교육, 경제운전 경진대회**(연 3회, '13.8~12), **가상체험관 운영**(연중)
- 자동차 등록·이전 불편 민원 해소
  - \* 변경등록 신청기간(15일→30일), 상속인 자동차 이전등록 기간(3개월→6개월) 연장 등
- 민자고속도로의 높은 통행료에 따른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민자사업구조 개편 및 미래관리운영권 유동화 방안 검토
  - \* 고위험-고수익의 사업구조를 저위험-저수익 구조로 전환하고, 미래운영권(30년 후)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여 통행료 인하에 활용
- 항공권 총액운임 표시제 전면 시행('13.12, 항공법 개정)

## □ 환경생활

- 경관을 훼손하는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전국 860여동)을 정비하기 위해 법적근거 마련('13.6) 및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정비 추진('14년~)
- 재해예방, 보행안전, 경관개선 등을 위해 전선 공동구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선 지중화 추진
  - \* 전선공동구 특별법('13.5, 의원발의) : 기본계획 수립(10년 단위), 도로관리청이 공동구 설치, 한전 등이 전선 지중화한 후 기존 전주 등 철거 등
- 지역별 랜드마크 조성을 위해 지자체 지원사업\* 및 컨설팅 지원\*\* 추진
  - \* 국토환경디자인시범사업 : '09~'12년 25개소 109억, '13년 8개소 53억원 지원
  - \*\* 경관분야 민간전문가 지자체 지원('13년, 3개소) 등
- 30만 이상 지자체의 경관계획 수립을 의무화('13.12)하고, 한옥의 신규 보급 지원기반 구축(한옥 등 건축자산법, '13.4 의원발의)
- 개발제한구역 내 방치·훼손된 공간에 누리길·여가녹지를 조성하고, 수요가 많은 여가시설 입지 허용(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입법예고, '13.6)
- 훼손·복개된 하천은 자연형으로 복원하고, 기 정비된 하천은 친수·문화공간과 생태·보전공간을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 \* 하천을 친수·보전·복원지구 등으로 지정·관리토록 유역별 하천관리계획 마련('13.12)

가. 대중교통 육성 및 수요관리정책 추진

- (대중교통 육성) 환승불편 완화 및 맞춤형 서비스 확대
  - 이용자 중심의 노선·시설·요금 체계를 위한 철도·버스 등 전국 대중교통망 연계·통합 계획 수립 추진('13.5 실태조사 실시)
    - 문화·상업·업무시설 등을 갖춘 “복합환승센터” 사업 추진
      - \* 동대구역·동래역 사업착공('13.하), 신규 환승센터 지정('13, 익산역 등 5개)
  -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제도를 도입('13.10)하고, 정기이용권버스 노선(3⇒5개) 및 산업단지 통근버스('12년, 9개 단지) 운행 확대
  - 광역급행버스(M버스) 노선(18⇒21개)을 확대('13.9)하고, BRT(간선급행버스체계)도 청라~강서('13.7. 개통) 및 대전역~세종('13.9. 착공) 구축
    - 대중교통·보행자 중심의 대중교통전용지구 확대(부산동천로, '13.9. 착공)
      - \* 시범지역인 대구시 중앙로('09구축) 평가결과 대중교통 이용객 증가(44%, 2년간), 보행자 증가(18%), 상권 활성화, 시민호응도 증가(77%)
- 수요관리정책도 병행 추진
  - (효율적 주차관리) 주차장설치상한제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13.10) 및 실시간 주차장 정보를 공유하는 스마트 주차관리시스템\* 도입
    - \* 스마트주차시스템 기술현황 및 지자체 수요조사('13.9)
  - (승용차 공동이용 활성화) 세종시를 카쉐어링\* 시범도시로 선정하고, 자가용 감축모델 개발 및 지원방안 마련('13.12)
    - \* 자전거 공동이용처럼 승용차를 시간단위로 전국 주차지점에서 빌려쓰는 방식
  - (교통물류체계 평가) 교통개선 특별대책지역 지정을 위해 '13년도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 조사·평가 추진('13.12)

## 나. 출퇴근 교통망 확충

◇ 그간 간선망 투자에 집중하고, 도시내 교통은 상대적으로 소홀하였으나, 출퇴근 불편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의 지원 확대 필요

\* (도로투자비율) 지역간 : 도시부 = ('13) 6:4 ⇒ ('17) 5:5

(철도투자비율) 일반철도 : 도시부(광역·도시)철도 = ('13) 8:2 ⇒ ('17) 6:4

### □ 대도시권 도시철도 구축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도입 검토(현재 예비타당성 조사중)

○ 서울7호선 연장 구간 착공('14.상, 부평구청~석남), 서울9호선 2단계 개통('14.하, 논현~잠실운동장), 대구3호선 개통('14.하) 등 적기 추진

○ 기존 **중전철 중심**에서 탈피하여 자기부상열차, 무가선티램 등 차세대 도시철도 교통수단 개발을 통해 **상용화 추진**

\*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 인천공항내 시운전('12.9~)을 거쳐 '13.9월 개통  
무가선티램 : 오송 차량기지내 시험운행('12.9~)

○ 광역철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광역철도 국고지원 비율 상향 등 제도개선 추진(기재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의 필요)

\* (현행 국고지원비율) 국가시행 75%, 지자체시행 60%(서울시의 경우 40%)

### □ 도시 혼잡도로 개선 : '20년까지 출퇴근 통행속도 30% 향상

○ 도로 확장·신설 중심에서 병목구간, 대중교통시설 개선 등 도심 혼잡 해소에 중심을 두는 **지·정체 해소 종합대책 마련**

#### 추진방안

◇ 대상도로 : 간선도로 ⇨ **洞지역 국도·지방도, "대로" 이상 도로**

◇ 혼잡기준 : 미정의 ⇨ 도시 규모별 혼잡 기준 제시

\* 서울 15km/h(일 3회), 광역시 20km/h, 인구 50~100만 25km/h(이상 2회) 등

◇ 지원방식 : 공사비 50% ⇨ 총사업비의 70% 이상

◇ 사후평가 : 없음 ⇨ 효과평가 후, 차년도 이후 예산 반영

○ 도시혼잡도로 개선사업 수요조사 실시('13.7), 시범사업 대상구간 선정('13.10), 사업시행 세부지침 개발('14.상)

## 다. 택시산업 선진화

◇ 과잉공급, 낮은 요금 등으로 수입 구조가 악화되고, 승차거부·도급택시 운행 등 불법행위로 서비스도 저하되는 악순환 반복

\* 개인택시(대수) : '95년 118,436대 ⇒ '11년 163,443대(38%증가)

\* '98년 이후 연평균 요금인상 : 버스 6.1%(500원⇒1,050원), 택시 4.5%(1,300원⇒2,400원)

□ (주요 대책) 사업자·운전자·이용자 모두 윈-윈하는 종합대책 마련

○ 엄격한 총량제 시행, 과잉공급 택시 감차보상 지원, 개인택시 면허제도 개편 등 택시의 근본적 문제인 과잉공급 해소

\* '13년 감차사업 : 총 167억원, 1,282대(국비 50억원, 지방비 117억원)

○ 운송비용 전가 금지, 근로시간 상한제 도입, 운전자 복지기금 조성, 부가세 환급금 지급방식 개선으로 운전자 근로여건 향상

○ CNG 등 택시연료 다양화, 공영차고지 건설 지원, 전국 택시 통합 콜센터 구축, 요금 다양화·현실화로 택시산업의 경쟁력 제고

\* CNG 택시 개조(대당 430만원) 및 전용 충전소(개당 14억원, 300대 규모) 확충 지원

○ 승차거부 등 불법행위 처벌강화, 에어백 설치 의무화, 택시전담 관리센터 설치 등을 통해 서비스 향상 및 정책 추진 역량 강화

□ (향후 계획) 택시노사 4개 단체를 최대한 설득하여 4월까지 택시 지원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국회에 제출

○ 택시 종합대책은 관계부처·기관 협의를 거쳐 6월에 국가정책조정 회의에 상정·확정하고, 이에 따른 관계법령 개정 및 사업 추진

\* 감차보상 : 방침결정('13.4) → 감차신청('13.6) → 국비지원·감차실시('13.7~12)

\* CNG 전환 : 연구용역('13.4~10) → CNG 개조 및 충전소 예산 확보('13.6~12)

## 라. 합리적인 철도경쟁방안 마련

◇ 철도운영은 장기간 철도공사의 독점으로 소비자 요구에 둔감하고 적자·부채 증가 등 많은 폐해 발생

\* 영업적자 : △4,779억원('04)→△5,224('11), 영업비용 : 3.9조원('05)→4.5조원('11)

\* 부채급증 : '11년 25조원(철도공사 11조, 철도공단 14조) ⇨ '20년 최소 50조원  
↳ 악순환 고리(부채증가 ⇨ 국가부담 증가 ⇨ 투자부족 ⇨ 서비스 부실 ⇨ 부채증가)

□ (주요 정책방향) 철도부채 감축, 서비스 개선 등 철도산업 발전과 요금인하 등 철도이용 활성화를 위해 철도 경쟁정책 기조 유지

\* 민간참여 방식(기존 案)은 요금인하, 철도부채 상환, 민간 창의성을 통한 서비스 차별화 등을 위해 추진하였으나, “민영화”, “특혜” 논란도 야기

○ 국가·국민·철도산업 모두의 상생발전과 국민행복 증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합리적 경쟁도입 추진

□ (향후계획) 민·관 합동방식, 제2 공사 설립 등 다양한 대안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합리적 경쟁도입 방안 마련('13.5)

○ 특히, 용산개발 위기에 따른 철도공사의 재무구조 악화와 철도 운송시장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철도공사 자구노력도 강화

- 비상경영으로 전환('13.3)하고, 사업구조 개편, 인력 재배치 등 강도 높은 철도공사 경영 효율화 계획 수립('13.6) 및 추진

## 마. 용산역세권 개발

□ 철도공사가 책임경영 원칙에 따라 자율성을 갖고 민간투자자와 협약하에 추진하는 민간 개발사업이므로 정부 불개입 원칙 유지

○ 단, 코레일의 본사업/부대사업 회계를 구분하여 경영투명성을 제고하고, 철도운행은 한치의 차질없이 수행



## 바. 항공산업 지속 성장 지원

### □ 항공기술 · 레저산업 육성

- 민간항공기의 실용화 기술(설계 · 인증 · 성능시험 등)을 개발하여, 첨단 민간항공기의 국산화 및 수출기반 확대 조성('13.12)

\* 민간 소형항공기급 시제기 개발완료('13.12)→민간무인항공기/중형항공기급('13~'20)

- 항공기 등의 안전성 · 성능시험 · 기술개발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항공기 비행종합시험 인프라' 개발 구축('13~'20)

\* 항공안전기술센터 출범('13.4), 근거법 제정('13.12), 상세기획연구('13.6~'14.4)

- 항공기용 제동장치 · 타이어 등의 정밀시험장비 국산화 개발('13)을 추진하고, 민 · 군 겸용 항공기 제동장치 종합시험센터\* 구축('13)

\* MOU 체결 및 기반시설 착공('13.5), 시험장비개발 · 구축('13.12), 운영 개시('14년초)

- 항공레저 수요에 맞춰 이착륙장 등 설치근거를 마련('13.12)하고, 항공레저 체험업 신설 등 레저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 정비('13.12)

\* 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 동호인 및 체험 인구는 약 13만명('12년 기준)

### □ 수요맞춤형 지방거점공항 육성

- 지역주민들의 공항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기존 공항시설 확장 또는 객관적 검증을 거쳐 신공항 추진 검토

\* 김해 : 국제선터미널 확장 착공('13.12), 활주로 용량 증대 세부설계('13.3~11),

- 항공수요 조사 · 예측 실시('13.6~'14.7)

**가. 공정한 건설시장 질서 확립**

- ◇ 건설업은 수직적 업무관행으로 불공정한 거래가 빈번하고, 하도급, 건설근로자에 대한 대금 체불문제 지속 발생
- ◇ 특히, 건설ENG 시장은 하도급자 보호제도가 없어 불법 하도급, 대·중소기업간 수주 불균형 심화

□ **대·중소기업 상생 발전 지원**

- 대기업을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소규모 공공공사의 범위 확대
  - \* 개선안 마련 및 의견수렴(4~5월), 행정예고·규제심사(6~8월), 고시개정(9월)
- 중소건설업체가 수주하는 소규모 공사에 불리한 건설대가 산정 기준은 실태 조사('13.3~6)를 거쳐 개선('13.8)
  - \* 예) 실제로 4시간 작업(1일 미만)을 위해 장비를 임대하더라도 1일치 대가를 지불하고 있지만 품셈에서는 4시간만 인정
- 음성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건설 ENG 분야 하도급 실태를 분석 ('13.5~12)하고 하도급 양성화를 위한 개선안을 마련('13.12)
- 건설ENG 종합평가 제도를 도입(개선안 마련, '13.12)하여 대·중소 업체 구분에 활용하고, 중소 ENG기업 맞춤형 지원책 마련

□ **건설시장의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 발주자가 건설업자에게 공사이행보증을 요구하는 경우 건설업자에게도 발주자의 공사대금지급보증 요구권 부여
- 계약조건(공기연장) 변경시에도 공사금액 미조정 등 건설업자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계약내용을 무효화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의원입법, '12.10)

- 원도급자가 저가(낙찰률 82%미만)로 낙찰받은 공공공사에 대해서는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방안 마련, '13.6)
- 건설공사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공사 참여자간 분쟁에 따른 거래비용을 절감(건설법 개정안 의원발의, '12.10)
- 건설산업정보망을 통해 원도급업체의 보증서 미발급, 재하도급 등 불법하도급 사례를 상시적으로 점검·처분하여 하도급업체 보호('13.4)
  - 건설불공정해소센터(가칭)를 설치하여 불공정 행위에 대한 주기적 현장점검 및 시정명령 등 적극적 행정조치 실시(개정안 마련, '13.5)
    - \* 현행 불법하도급신고센터는 신고된 사항에 대해서만 수동적으로 조치
- ※ 건설산업 분야의 불공정한 관행 해소를 위해 기존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 마련('13.4)

#### □ 건설기능인·장비업자 처우개선

- 건설기능등급제를 도입하여 건설기능인(일용직)의 숙련도 상승에 따라 처우를 개선(개정안 마련, '13.12)
- 건설장비업자 보호를 위해 장비대금지급보증제를 시행('13.6)하고, 건설근로자 임금 체불방지 방안을 마련('13.12)

#### □ 공공공사 계약제도 선진화 검토

- 덤핑 낙찰에 따른 하도급업체 부담 전가, 과도한 가격 경쟁에 따른 기술경쟁 저해 등 부작용을 고려하여 입·낙찰제도 개선(기재부 협의)
  - 운찰제(運札制) 비판을 받고 있는 적격심사제도의 변별력 제고
    - \* 기재부는 「최저가낙찰제의 공과 평가 및 개선방안」을 국회 보고 예정('13.6)
- 예산부족, 민원 등으로 공공공사의 공기 연장시, 간접노무비와 경비를 일부 인정하는 방안 마련(기재부 협의)

## 나. 물류산업 선진화

◇ 국내 화주기업은 자가물류를 선호하여 물류전문기업 활용\* (제3자 물류)이 선진국에 비해 저조

\* 한국 59%('12), 북미 80%('08), 서유럽 89%('09), 일본 70%('10)

◇ 다단계 운송 위탁 및 위수탁(지입제) 위주의 운송 구조로 인해 시장질서 왜곡 및 영세화 초래

\* 단순히 위수탁료만 수수하는 지입전문운송업체가 일반 운송업체의 40% 차지

□ 제3자 물류 활성화 : 현재 59% 활용률을 '17년까지 70%로 확대

○ 3자 물류를 이용하는 화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중소 물류기업에 대해서도 법인세 공제 신설 추진(기재부 협의 필요, '13.12)

\* 화주기업이 지출한 3자 물류비용의 5%를 공제(기존 3%)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 화주기업 대상 3자물류 전환 컨설팅사업(컨설팅 비용의 50% 지원) 지원도 확대(위탁기관 선정, '13.4)

\* 사업성과('08~'12) : 59개 화주기업, 약 156억원 물류비 절감(절감률 약 12%)

○ 이와 함께, 대기업 집단의 물류분야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및 관련 법령 개정 추진(공정위·기재부 협의 필요, '13.12)

\* 증여세법에 따른 모기업-자회사 간 정상거래비율(초과시 증여세 부과) 기준을 물류분야에 대해서는 보다 강화(현행 30%) 하는 방안 강구

□ 화물운송시장 체질 개선 및 영세 화물업자 지원 강화

○ 다단계 산업구조 해소를 위해 타운송업체에 일괄위탁을 금지하는 직접운송의무제를 시행('13.1) 후 보완하고, 표준운임제\* 단계적 도입('13)

\* 가칭 '표준운임협의회'(민간)를 통해 가이드라인 운임 산정, 시정권고 등 간접 강제 방식

○ 영세 화물운전자 비용절감을 위해 통행료 할인확대\*('13.12) 및 사업용 자동차 검사수수료 절감('13.12)

\* 심야 할인(21시~6시, 20~50%) ⇒ 거리별 할인제도 적용 검토

○ 운송물량·배차정보 지원을 위해 우수화물정보망 인증제\* 시행('13.6)

\* 우수화물정보망 인증위원회 구성('13.3), 인증센터 설치('13.4), 인증심사('13.5)

**가.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

◇ 가격상승기 도입된 수요억제-공급확대 기조에서 탈피하여 과도한 정부개입·규제를 완화하고, 세제·금융지원을 통한 시장회복 도모

**1. 주택 공급물량 조절**

## □ 공공분양물량 공급 축소

- 공공분양주택의 공급물량을 기존 연 7만 → 2만호 이하로 축소하고, 60㎡ 이하 소형주택으로만 공급하고 소득심사를 강화

\* 기 인허가된 물량을 감안, '13~'17년 신규 인허가 물량은 1만호 수준으로 관리

- 수도권 GB내 신규 보금자리지구 지정을 중단하고, 기존 GB 지구는 공공분양주택 공급물량 및 청약시기 등을 조정

## □ 기 추진중인 개발지구의 사업계획 조정 및 민간부문 공급축소 유도

- 시장수요를 감안, 택지지구·보금자리지구 등의 사업계획 조정 추진
- 인허가 후 의무 착공기간을 연장(2→3년)하고, 도시형생활주택 공급도 적정수준으로 조정

**2. 유효 주택구입수요 창출**

## □ 생애최초 구입자 등 실수요자 지원 강화

- 부부합산 6천만원이하 가구가 6억·85㎡이하 주택을 생애최초 구입시 취득세 한시 면제(금년말까지)

- 국민주택기금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 강화
  - 금년도 지원규모를 확대 (2.5→5조원)하고, 30년 분할상환 대출 신설
  - 소득요건을 상향 (5.5→6천만원)하고, 금리도 인하 (3.8→3.3~3.5%)
  - 연말까지 DTI를 은행권 자율로 적용하고, LTV도 70%로 완화
- 일정요건의 주택 (85㎡·6억이하, LTV 70%↑) 또는 현재 임차로 거주중인 주택 구입 무주택자(6천만원 이하)에게 생애최초 수준(3.5%) 자금 지원

#### □ 주택구입자에 대한 지원 강화

- 9억이하 신규·미분양주택 및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85㎡·9억이하 기존주택 구입시, 향후 5년간의 양도소득세액 전액면제(금년말까지)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50~60%) 폐지, 단기보유 양도세 중과 완화\*
  - \* 1년내 단기양도는 50%→40%, 2년내 단기양도는 40%→기본 세율(6~38%)
- 민영주택 청약제도를 추첨제 중심으로 개편
  - 가점제 적용대상을 85㎡이하에만 적용(85㎡ 초과 폐지)하고, 적용 비율도 현행 75% → 40%로 완화
  - 교체수요 지원을 위해, 유주택자에게도 가점제 1순위 자격 부여

#### □ 시중 여유자금을 활용한 민간임대시장 활성화

- 여유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투자될 수 있도록 “토지임대부 임대주택”(토지매입 부담완화), “주택임대관리업”(임대관리 부담완화) 신설
- 의무 임대기간 준수, 임대료 인상률 제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準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 세제감면 등 혜택 부여
  - 85㎡이하 주택, 10년 의무임대, 최초임대료(시세이하) 및 임대료 인상률 제한, 주택임대관리업에 위탁관리 등 의무 부여
  - 재산세를 공공임대주택 수준으로 감면하고,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 공제율 60% 적용(현재 다주택자 최대 30%)

## □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 정비 등

- 분양가상한제를 시장상황에 따라 신축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국회에서 지속 논의
- 국민불편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대폭 해제
- 대규모 투자를 수반하는 계획입지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한시감면(향후 1년간 수도권 50%, 이외 지역 100% 감면, 개발이익환수법)

## □ 규제완화를 통한 주택정비사업 활성화

-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조합원에게 기존주택의 전용면적 범위내에서 2주택 공급을 허용 (현재는 증전가격 범위 내에서만 2주택 허용)
- 주택 미분양자에 대한 현금청산시기를 후반부로 늦춰 자금부담 완화
  - \* 분양신청종료일 이후 150일 이내 →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90일 이내

## □ 15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에 대해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범위내에서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방안 강구

- \* 현재는 수평 및 공지내 증축, 기존 1층을 필로티로 전환시 1개층 증축허용
- 전문가 TF를 구성하여 구체적 허용범위와 전문기관의 구조안전성 검토 및 건축심의 의무화 등 안전성 확보방안을 마련
- 도시과밀·전세난 우려가 없도록 지자체별로 리모델링 기본계획(가칭) 수립후, 중도촉심의 및 국토부장관 승인을 받아 시행

## 나. 하우스푸어 및 렌트푸어 지원방안

### 1. 하우스푸어 지원방안

- ◇ 하우스푸어의 연체위험 및 주택 보유의사 등에 따라 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

□ 주택보유 희망자 : 채무조정, 대출채권 매각

- (연체우려, 장·단기 연체자) 금융권 자체적으로 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활성화)
- (3개월 이상 연체차주) 캠프를 통해 부실채권을 매입하고, 채권 전부 매입시 차주에게 보유지분 매각 옵션 제공
- (정상차주(85㎡이하 1주택,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주택금융공사가 대출채권을 매입하여 이자부담을 낮추고, 최장 10년간 원금상환 유예

□ 주택매각 희망자 : 임대주택 리츠에 매각

- 소유자가 리츠에 주택을 매각하고, 이를 임대(5년) 하는 방식
  - 임대기간 종료 후 원소유자에게 재매입우선권 부여
  - 재매입하지 않은 주택은 리츠가 시장에 매각하되, 미매각된 주택은 LH가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
- \* 1차사업으로 500호 매입을 추진하고 성과를 보아가며 확대 검토

□ 50세 이상 은퇴자 등의 경우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60세→50세로 낮추어 주택연금 일부를 일시금으로 받아 부채상환에 활용토록 개선

## 2. 렌트푸어 지원방안

◇ 전세대출을 담보대출화하여 금리인하·한도확대가 가능하게 하되, 집 주인 성향 등을 감안하여 다양한 방안을 시행

□ 집주인 담보대출방식 (목돈 안드는 전세 ①)

- 대출이자를 세입자가 납부하는 조건으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본인의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하여 대출금리 인하
  - \* 금융기관은 수도권 5천만원, 지방 3천만원 한도내 대출
- 집 주인에게 다양한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금융규제를 완화
  - \* 대출금액분 소득세 비과세, 이자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재산·증부세 감면
  - \* 집 주인 담보대출시 연말까지 LTV 70%까지 완화, DTI 자율 적용



□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 (목돈 안드는 전세 ②)

- 임차인이 전세자금을 대출한 금융기관에게 **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시**
  - 금융기관에게 **우선변제권**을 부여함으로써 전세대출의 담보력을 강화하여 **대출금리 인하 및 한도확대**

□ **전세자금 대출요건 조정을 통해 목돈 마련 부담 완화**

- **소득요건 상향**(부부합산 4 → 4.5천만원), **대출한도 확대**(8천만원 → 수도권 1억원, 지방 8천만원), **지원금리 하향조정**(3.7 → 3.5%)
- **전세금 증액분에 대해서도 기금 추가대출을 허용**
  - \* (현행) 개인별 보증한도가 남아있어도 추가대출 금지 → (개선) 보증한도내 허용

**다. 시민 주거복지 강화 :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

◇ 공공임대 공급 확충과 주택바우처·기금지원 등 수요자 지원을 통해 '22년까지 5분위이하 무주택 550만 가구 모두에게 주거지원

□ **공공주택 연 13만호 공급**

- 임대주택은 건설(7만)과 매입·전세방식(4만)을 합하여 **연 11만호**, 분양주택은 최근 시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연 2만호** 공급

< 공공주택 공급계획 >

	공공분양	임대계	건설임대	국민	영구	공공임대		매입·전세
						공공	민간	
연 13만호	2.0	11.0	7.0	3.8	1.0	1.2	1.0	4.0

\* 행복주택(5년간 20만호)은 건설임대 물량에 포함하여 추진

- 공공건설임대 물량은 외곽 (GB, 신도시) 보다는 **도심** (철도부지, 국공유지 등 활용)내 입지가능한 물량을 대폭 확대
- 도심내 즉시 입주 가능한 매입·전세임대 물량을 확대

## □ 행복주택 공급계획

- 행복주택은 철도부지, 유휴 국·공유지 등을 활용하여 업무·상업시설이 포함된 복합개발 방식으로 건설, 지역 활성화도 도모
- 향후 5년간('13~'17) 총 20만호를 공급(인허가 기준)하고, '13년에는 수도권 도심의 6~8개 지구에 1만호 시범사업(일부는 착공 추진)

## □ 맞춤형 주거비 지원 강화

- 저소득 가구의 월 임대료 보조를 위해 주택바우처 도입
  - 현행 주거급여 제도를 주택 바우처 제도로 확대·발전시켜 지급 대상 확대·임대료 지원기능 강화 등 추진
  - 지원금액·대상·전달체계 등에 관한 연구를 거쳐 '14.상 시범사업 후 '14.하 기초생활보장제도 개별급여 전환과 함께 도입
- 주택기금을 통한 구입·전세자금지원을 기존 18→28만가구로 확대
- 생애주기상 주거취약시기에 대한 주거지원 강화
  - 대학생(전세임대, 기숙사 건설지원), 신혼부부(전세자금 지원), 고령자(주거약자용 주택공급, 개조지원), 단신가구(원룸형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 공공임대주택을 기타 사회복지 서비스의 연계거점으로 활용
  - 임차인에게 일자리, 보육 등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주거복지사를 양성·배치하여 주거복지서비스의 품질향상 유도

⇒ 종합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경제관계장관회의, 주택정책 심의위를 통해 정기적으로 집행상황, 성과 등 점검

⇒ 칸막이 없는 관계기관간 협업 및 시장과의 피드백을 통해 속도감 있게 후속조치 추진

## II 부처간 협업과제

### 1 공간정보를 활용한 부처간 협업사례

사례

부동산 공부 18종  
국토부 11종, 안행부 4종  
법원 3종

부처간  
정보공유

1종으로 통합

진행중



### 2 부처간 협력을 통한 정책효과 제고

친환경 국토

환경부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고용부

임대주택 단지내  
사회적 기업 유치

대학생 주거지원

교육부

기재부·금융위

주택금융·세제 지원

소통·협업 확대를 위한  
직원교육 강화

범부처·범부서 T/F 활성화

협업 보상 시스템 구축

창의적 융합정책 발굴·추진

## 2 Track - 3 Stage

